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

3109
301c (340.911)

전산필



117
33100

통일문제
북한사회의
경제정책
여야정책
통일정책
통일정책

통일원



차례

제1편 통일문제의 이해 7

I. 머리말 / 9

II. 통일논의의 기본전제 / 10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III. 우리의 통일노력 / 17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대북정책

IV.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21

제2편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 25

I. 머리말 / 27

II. 북한 정권의 실체 / 29

1. 북한의 권력 장악 과정
2. 주체사상

Ⅲ. 북한 사회의 이해 / 43

1. 북한의 권력구조
2. 북한의 경제
3. 북한의 사회
4. 북한의 교육

Ⅳ.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과 그 시사점 / 56

1. 독일 통일
2. 예멘 통일
3. 분단국 통일의 시사점

Ⅴ. 통일준비와 대학인의 역할 / 65

1. 대학인의 역할
2. 통일 이후의 대비

참고문헌 / 70

제 1 편
통일문제의 이해

박 영 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고 인간 생활의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탈냉전의 지역 질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언을 맞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체제 유지를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문민정부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민족도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 이후 그 어느때 보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민족적 소망인 통일문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다듬은 후, 이를 차분하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II. 통일논의의 기본 전제

1. 통일의 당위성

우리에게 통일이란 명제는 더이상 하나의 이상이나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것은 동서독이나 남북에만이 통일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일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보아야 할 몇가지 이유를 들면¹⁾

첫째, 남한 사회의 발전이다.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남한사회 내의 계급혁명과 공산화를 기도하는 북한의 목표는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며, 우리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은 우려로부터 자신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로서 통일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 환경의 변화이다. 남한의 구소련(러시아) 및 중국과의 수교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추진으로 특징지워지는 동북아 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분단 구조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남북한이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1) 박영호·김도태, "통일환경의 변화와 「8·15 경축사」의 상황적 배경,"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4~17.

가 되었다.

셋째, 북한 사회의 변화가능성 증대이다. 북한은 동기유발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해 옴으로써 경제적 피해현상이 나타나고 주민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이상 남한 공산화 추진 전략에만 매진할 수는 없으며, 북한 내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 개방과 사회 개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 체제의 개방·개혁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지도자 교체도 통일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민족 분단의 책임을 더이상 당사자에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과거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증오와 대립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 관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여 통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두지 않는 통일주

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417~432 및 감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장은 공허한 담론으로 끝나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³⁾

첫째, 남북한 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이다. 남북한의 7천만 동포는 같은 혈통에 같은 말과 글을 쓰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일구며 같은 역사를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이질화의 심화는 남북한 주민을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민족간의 경쟁을 뛰어 넘어 남북한 주민이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더불어 살기 위하여 통일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통일은 남북한 민족 성원 모두에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통일은 바로 남한이나 북한 어느 일방만의 번영과 복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서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없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발전과 도약의 발판이다. 만일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단이 영구화된다면 민족의 역량은 분산되어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민족의 응비를 기약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재결합하지 못할

3) 정용진,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33~37.

때 우리 민족의 재도약은커녕 조선말엽처럼 열강들의 각축속에 빠질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한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은 좁게는 동북아에, 그리고 넓게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인 것이다.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소명이며 실천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에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며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부정적 상황의 발생이나 전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2.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

(1) 기본 철학

통일은 단순히 분단되었던 국토, 정부 그리고 민족이 재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에 하나의 헌법,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단일 주권국가의 건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민족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됨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며 민족의 번영이 약속되도록 하는 통일이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시한 제반 정치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통일 국가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민족공동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은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획일화, 집단화하여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상적 통일을 하고, 하나의 정당으로 일원화된 정치활동을 펴며,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마저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제도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위한 명분 때문이지, 실제로 일반 국민 다수가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인류 역사 발전의 맥락이나 오늘의 세계질서 재편과

정을 볼때 남한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중에서 어떠한 체제와 이념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정당화되며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알맞는 것인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찾아 낸 가치 있는 삶의 공통 분모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더이상 이념 경쟁에 매몰되기 보다는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함께 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통일 원칙

통일원칙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나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원칙과 통일운동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조국의 미래상 실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1970년대 이후 자주·평화·민주를 3대 통일원칙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 못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쟁이나 어느 일방에 의

한 상대방의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우선 자주성의 원칙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남북한 스스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주성의 강조가 국제사회와의 고립적인 배타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적 입장이란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의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평화의 원칙이다.

통일원칙에서 평화란 바로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함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무력전쟁이 되풀이되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파멸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력이나 힘을 사용하여 강제로 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통일 원칙은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이나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화 추구의 노력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원칙이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번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며,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또한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원칙으로 민주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며, 통일은 계급이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원칙을 통해서 만이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의 대단결을 달성할 수 있다.

Ⅲ. 우리의 통일 노력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0년대 이후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선

인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과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통일노력이 요구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이후 여러 계기를 통해 밝힌 통일정책에 대한 구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광복 49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토적·제도적·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자세로부터 적대감과 대립이 장기화됨으로써 훼손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의 바탕 위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접근의 방식으로 그 주안점을 변화시켜 왔다. 즉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가 그것이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는 남과 북이 냉전시대의 산물(産物)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서로를 파괴·전복하거나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을 지켜가면서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이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신뢰를 토대로 통합과정을 관리하는 단계로서, 남북간에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의 동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남과 북은 이 단계에서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남북연합에 공동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들 공동기구에서 국가통합 즉, 정치와 제도의 통합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정상회의나 각료회의를 열어 동질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거나, 남북의 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셋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합의·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국가 수립이 곧 통일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분단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러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정부 수립 후에도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북 정책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문민정부의 이점을 살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의 틀이 마련됨으로써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은 일단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남북대화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북한도 이제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냉전의 껍질을 깨고 본격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자유·복지·개방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었으므로써, 남북한이 협력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함께 대북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전문)이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1조)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도 이제 이념 대결의 틀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구하였다.

IV.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남북간 분단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가 한반도 분단의 영구 고착화 가능성의 증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북한 경제의 부진과 북한 주민의 빈곤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통일의 과제는 남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변국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 국제문제로 비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현 시점은 우리 민족에게 흔치 않은 민

족발전의 기회와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탈이념적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 관계가 이념대립을 지속함으로써 더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과 공영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두 개로 나누어진 민족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빈칸으로 남았던 민족발전사의 공백 기간을 배우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주된 임무는 북한 주민보다는 남한 국민의 손안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 과정이 피와 땀을 수반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말해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르는 부담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 통일은 정치·군사적 대결에 따른 어느 일방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하는 일원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열강이 각축했던 구한말의 역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이 중요한 통일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대세 앞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통일역량」을 더욱 기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제 2 편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

한 준 상 (연세대 교수)

I. 머리말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다. 통일은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더욱 기르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하고, 국제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각고의 노력이 요청된다.

통일은 우리 남한만의 노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대상인 북한이 있다.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느냐 하는 것은 통일의 방향과 성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 내부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북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문제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민족은 40여년간을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다. 장기간에 걸친 이질적 생활은 남북 주민의 생활상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고, 이에 따라 이질감을 서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북한 주민이 보여주고 있

는 반응에 우리가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것은 우리와 북한 주민 사이에 깊은 골이 형성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북한과의 통일은 단지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통합을 일구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보다 경제적인 역량이 월등하고, 장기간에 걸친 접촉을 통해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통합의 어려움을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문제의 전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국제정치적인 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통일에 따른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복잡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는 그 해결방안이 담겨져 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민족의 영원인 평화통일을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 일반의 광범위한 참여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이를 성급하거나, 일방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

한 것이다. 그러자면 북한사회에 대한 좀더 체계화된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예멘의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로 통일문제에 대한 좀더 현실에 근거한 보편적 이해가 필요하다. 나아가 통일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 북한 정권의 실체

1. 북한의 권력 장악 과정

해방 당시의 공산주의자의 계보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서울의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국내파이다. 국내파는 일제하에서 조선공산당을 창건하고, 이끌어 오던 인물들이 주축이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박헌영, 이주하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상당수의 지식인, 학자, 작가, 예술인들이 가담하고 있었다.

둘째, 연안파로서 중국 연안에다 본부를 두고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며, 항일 투쟁을 해왔던 조선독립 동맹계이다. 대표적 인물은 김두봉, 최창익, 무정, 한빈, 김창만, 박일우, 허정숙, 이상조 등이다.

셋째, 빨찌산파로서 중국의 동북 항일 연군계의 인물들로 해방 당시 만주로부터 시베리아로 피신하여 소련군의 군사훈

련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일성, 안길, 임춘추, 최현, 김일, 서철, 김광협, 박성철 등이었다.

넷째, 소련파이다. 소련에 거주해온 조선인 1세 또는 2세로 소련의 공민권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소련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당생활의 경험을 쌓았으며, 태반이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정치·행정 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일종의 테크노크라트였다. 대표적으로는 허가위, 박창욱, 박의완, 김승화, 박영빈, 기석복, 김재욱, 남일, 최현학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초창기에는 특별히 두드러진 조직은 아니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공산주의의 세 계열에서 몇차례의 권력 투쟁을 통해 정권을 장악해나갔다. 물론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는 소련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정부는 패망이 임박한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일본의 항복 이후 미·소 간의 합의에 따라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8월 24일 평양에 선발대를 파견한 소련군은 다음날 그곳에 다 북조선 주둔 소련군 제25군 사령부를 설치했다. 사령관은 치스차코프 대장이었다. 그는 북한의 통치에 관한 일체를 장악하였다.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우선 착수한 것은 인민위원회의 지방조직이었다. 인민위원회의 지방조직은 외관상 자치행정기구였으나 철저히 소련군의 의사대로 조직된 기관이었다. 다시 말해서 인민위원회는 소련군정의 철저한 대행기관이었으며 군사령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김일성이 소련 군정 당국의 비호 아래 당권을 장악한 것

은 1945년 12월 17~18일에 열린 조선공산당 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였다. 그리고 인민위원회의 지방조직을 기반으로 1946년 2월 9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김일성은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김일성의 권력체제 구축은 복잡한 권력투쟁, 특히 몇차례의 숙청을 통해 확고해졌다. 제1단계는 '남조선 노동당파(1953~)', 제2단계는 소련파(1953~1956)와 연안파(1956~1958), 제3단계는 국내파(1953~1970),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찌산파(1969~)의 숙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력 투쟁의 과정은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2.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

모든 공산주의 체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를 둔 공식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정권의 초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을 채택하였으나, 김일성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더 큰 비중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북한의 유일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주체사상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주체사상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처음 표면화된 것은 1955

년 12월 28일 '당 선진 선동원 대회'에서 '당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주장한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사대주의·형식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1958년 김일성의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와 1959년 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도 이러한 노선은 견지된다. 이렇게 제기된 주체는 권력을 둘러싼 대내적 환경과 중소분쟁과 그에 따른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다중심 체제화의 진전에 따라 주체사상으로 발전되어 나간다.

대내적으로 주체사상은 권력의 정당화와 관계가 있다.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 후르시초프를 중심으로 한 스탈린 격하 운동은 스탈린의 노선 하에 있던 김일성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 및 당지도체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벌어졌던 당 내부의 정책논쟁에서 연안파의 김두봉, 최창익과 소련파에 속해있던 박창욱, 박영민 등은 그때까지 당의 경제건설 과정이 지나치게 중공업 위주로 전개되어 왔고, 당의 지도체제에 민주주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업의 비중을 낮추고, 좀더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당의 지도체제도 집단지도 체제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지도노선에 반대하는 자들을 마

르크스-레닌주의를 제대로 이해못하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소련과 중국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주체도 창조성도 없는 분자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제거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상에서의 주체'는 혁명과 건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뿐만 아니라 당내부의 지도체제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화립의 요구는 1960년대 이후 북한노동당의 자주노선으로, 나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도이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1960년대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입장의 대립과 분열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서 북한의 자주노선은 구체화되어 나갔다.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김일성 자신의 정식화가 비로소 나타난다. 이 연설에서 자주적 입장, 창조적 입장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정치사상 의식을 드높이는 방법으로 주체사상이 등장한다.

그후 1970년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는 당규약을 개정하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로 명문화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나아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즉, 선행의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맑스-레닌주의는 객관적 요인을 강조하는 반면에 주체사상은 주체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다르며, 이는 맑스-레닌주의를 새롭게 창의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1992년 4월 9일 사회주의 헌법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만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로 개정하였다.

(2) 주체사상의 구조

주체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74년 이래 전당원과 전체 인민의 필휴의 책자가 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발행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982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이 중요한 문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체철학은 ‘철학의 근본문제란 철학이 무엇보다도 먼저 풀어야 할 기초적인 문제를 말하며, 이는 달리 표현해서 세계관이 다른 모든 문제 해결에 사상이론적·방법론적 기초를 이루는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체철학은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밝히

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아왔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새로운 근본문제로 제기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경우 관념론과의 투쟁에서 유물론의 종국적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운동과 진화과정에서 의식이 발생하였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계의 시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여 무엇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이 설정되는가 하는 것을 규명해야 하며, 이 문제가 바로 주체철학에 의하여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에게 있다는 사상이며 이는 다시 말하여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제1명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변화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맑스-레닌주의에서 사람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면,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면서 동시에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라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토대로 하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보다 확고히 하면서, 사회변혁과 진보를 위해 주체사상이 투쟁의 유력한 무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는 그 기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둘째,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셋째,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과 자주적 사상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하여야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자주적인 존재로 참답게 살며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 만큼 우선 정치적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에서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합법칙적으로 밝히고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를 노동계급의 사회로 개조하기 위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모든 구성요소는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으로 귀결되고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당의 최고책임자인 수령, 즉 뛰어난 특정 개인이 노동자 계급의 당을 건설하고, 당의 사상과 이론을 만들며, 혁명투쟁과 당의 활동을 지도하고 공산주의적 일꾼을 육성하여, 당의 역사를 창조한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에 있어 당과 혁명에 있어서 수령의 역할은 절대

적인 것이다. 당은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하며 수령의 유일한 영도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혁명의 지도사상과 이론, 전략·전술은 아무에게나 창시되고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되고 제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리는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될 수 있다. 따라서 바른 인식의 출발은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임무도 '위대한 수령 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하며 해석 선전하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영예로운 임무는 없습니다'로 표명되고 있다.

(3) 주체사상의 혁명관

주체사상에 있어서 사회역사 원리와 함께 지도원칙을 밝히고 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 입장과 함께 혁명운동의 지도적 원칙을 밝혀주어야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이론적이고도 실천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주체사상이 혁명의 지도적 원칙을 중요 구성 부분으로 삼게 된 까닭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임무를 띠어야 하는 데 있다.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에 있어 지도사상은 왜 필요한가? 지도원칙의 필요성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고 동력이지

만 그들이 지질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 체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혁명과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서 주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원칙은 세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적 입장, 창조적 입장, 사상 기본적 입장이 그것인데, 먼저 자주적 입장이란 김일성과 노동당이 그들의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 등이 바로 사상, 정치, 경제, 국방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원칙임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사상의 지도원칙의 또 다른 원리인 창조적 입장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해서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혁명운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것이다.

사상 기본적 입장이란 인민대중의 사상 개조와 정치 사업을 말하는데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선진적인 노동계급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정치사업은 모든 다른 사업에 앞서서 인민대중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대중 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지도원칙은 북한문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혁명목표는 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대내혁명, 남한지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대남혁명, 그리고 세계의 공산화 혁명을 수행하는 세계혁명의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가지 과업의 연관성을 중시하여 혁명의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임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내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은 남조선 혁명을 위한 기지를 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세계혁명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과도적으로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점령을 혁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질적 요새의 점령은 사회주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고, 사상적 요새의 점령은 사회 전체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의 두가지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수행을 당면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3대 혁명 가운데 사상혁명은 특히 중요시하여 이를 계급투쟁에 있어서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인민을 당과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그 수단으로 당조직은 물론 정권기관, 근로단체, 교육, 문화, 보건기관 등 모든 조직이 동원되며, 조직을 통한 각종 학습과 문학, 예술을 통한 군중교양 개조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일 관장 하에 '3대혁명

소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당·전인민적 차원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 운동' 및 '9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혁명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남조선혁명의 목표는 현 남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계열이 주도하는 민주연합정부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는데 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지역혁명으로 보고 있다.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전국적 범위'라는 부분을 삭제했으나, 북한에서 말하는 조국통일은 어떤 경우에는 '남조선혁명의 완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우선 1단계 혁명목표를 위해 한국내에 맑스-레닌주의 정당을 건설하며, 그 주위에 노동자·농민을 결속시켜 혁명의 주력군을 형성하고, '보조력량'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정세에 따라 정치투쟁·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과 비폭력 투쟁, 작은 투쟁과 큰 투쟁 등 여러 형태와 방법을 결합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대남혁명관은 적어도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세계혁명을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중요한 고리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혁명은 대남혁명의 대외적 환경으로서 '국제혁명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으로서 반미투쟁을 세계 모든 혁명역량의 우선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퇴보, 비동맹운동의 변화로 인해 세계혁명의 추진은 이론으로만 남아 있을 뿐 실제로는 자체의 대내 혁명기지의 보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근래 일부 구역의 경제개방, 원수로만 여기던 미국과의 북미회담에서의 태도 변화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4) 주체사상의 문제점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계승 발전' 시켰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면서 동시에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라고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자주성·창조성·의식성으로 보면서 사람의 위치를 높였다는 데에는 비판할 하등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주체사상에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하는 것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령을 매개로 해서 가능하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은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수령에 의해 부여되는 속성을 가진다.

수령에 대해 무한한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주체형 인간'이 되기 위한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주체사상에서 수령은 차라리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

화되어 있다. 즉 중세철학이 절대성을 신으로 보고, 헤겔철학에서 절대정신으로 보았듯이 주체사상에서는 수령이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에서 수령은 살아있는 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령은 전지전능해서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고 있어 과학은 물론 일상 생활에 연루된 부분에서도 수령의 계도에 의해 발전하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즉, 의생활 변화의 계기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최고 지도자의 「교시」에 의한 것으로 북한사회에서는 알려져 있다. 김일성이 여성의복에 대해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들이 소매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대담한 노출을 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여성들의 옷차림이 화려해지기 시작한 출발점으로 되어 있다.

자주성, 창의성은 자유와 비판과 결부된다고 볼 때, 북한의 경우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비판도 불가능한 획일적인 이데올로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주성과 창의성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전제로 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주체사상에서 자주성이란 과연 어떠한 의미이냐 할 때, 주체사상에서의 자주성이란 극도로 왜곡된 형식의 자주성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논리구조 속에서 사람이 과연 미래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맑스-레닌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주체사상에 의한 사회적 발전의 지표는 적어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밝지

못하다는 점이 주체사상의 가장 현실적인 한계이다.

Ⅲ. 북한 사회의 이해

1. 북한의 권력구조

북한권력구조의 핵심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로서 당우위체제이며 국가기관은 주권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 주석, 국방위원회 및 중앙인민위원회가 있다.

북한은 1992년 4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당과 국가간의 관계를 명시하였다. 즉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반대당이 없는 일당 독재체제에서 볼 수 있는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헌법상의 통치체제와는 달리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서 통치되는 체제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이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곧 수령 개인이 당과 국가와 인민위에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체제임을 말해준다. 한편 당우위 체제로서 노동당의 특징은 계급적 당이며, 수령의 사당(私黨)과 같은 것으로 되어있다.

노동당의 위상은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유일한 행동적 역량이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 노선으

로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진당에 수평의 사상체계, 영도 체계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

당조직 원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 원리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당지도기관이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앙 집권체제는 국가권력이 종국적으로 최고권력 기관에 집중되어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과 군의 관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일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군은 당의 군대이다.

국가기관으로서 주권기관은 ① 최고인민회의, ② 주석, ③ 국방위원회, ④ 중앙인민위원회가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당의 영도하에서 활동토록 되어있으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임시회는 필요시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대의원은 인구 3만명을 단위로 1명이 단일 입후보하여 투표로 선출되며 1990년 4월22일 제9기로 선출된 대의원수는 687명이다.

주석제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설한 제도로서 김일성에게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헌법상 주석의 지위는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헌법에서는 주석을 종전대로 '국가수반' 이면서도 '국

가주권의 대표자'가 아니라 '공화국의 대표자'가 되었다. 따라서 군사지휘권 등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소환제도를 만들어 권위를 약화시켰다.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조정에 따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부주석은 제9기 6차회의(1993. 12. 11)에서 2명을 4명으로 늘렸다.

국방위원회는 1992년 개정헌법에 김정일의 헌법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별도 국가기관으로 신설하여 김정일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일개 위원회에 불과하였던 것을 주석 다음의 국가기관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또한 국가 주석이 당연직이었던 것을 선거직으로 바꾸었다. 이로서 현 북한의 군사체제적 측면에서 보면 최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인 김일성의 유일적 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설된 기구이다. 그러나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군사 및 국방에 관한 사항을 국방위원회에 이관하므로써 명목상 국가 주권의 최고기관으로 남게되었다.

2. 북한의 경제

북한은 아직도 전형적인 명령형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

지해오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 계획국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 모든 물자의 생산, 교환 및 배분과정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며 시장의 가격기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체제에서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특성인 생산수단의 공유가 유지되고 있고, 의사결정과 정보유통의 구조가 중앙 집중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각 경제주체가 체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기부여도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형태가 물질적 유인을 동기부여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반면 북한의 체제에서는 '보다 나은 미래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도덕적 유인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전형적 사회주의경제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과 구조적 모순은 이미 동구권과 소련 등의 경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쿠바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압적인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라는 특성 이외에 폐쇄적 경제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민족적 자립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내부지향적인 폐쇄경제를 구축하여왔다. 그 결과 북한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세계경제연구소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제3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1987~1993)에 북한의 경제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는 GNP가 전년도 대비 5%, 1991년에는 3%씩

각각 감소했으며, 또 원자재와 에너지의 적기 조달의 어려움으로 북한총공업의 2/3를 차지하는 중공업부문의 공장가동율은 40 내지 50%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북한은 부분적으로 경제 개방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극심한 침체는 개방화의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취약성과 정치적인 위험 부담 때문에 개방은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3. 북한의 사회

북한 사회는 고도로 조직화 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조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에서는 일체의 자생적·자발적 조직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대신 당조직을 정점으로 하여 직업총연맹, 문학예술총동맹, 기자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들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예컨대, 1945년 11월 30일 조직된 직업총동맹은 31세부터 65세까지의 전국노동자, 사무원들을 직장 단위로 조직하여 사상교양, 기술습득, 노력경쟁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 소속된 인구는 1,250만 정도에 이르는데 1,950만명 정도의 북한 인구 중,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인구는 단체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사회는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이다. 나아가 행정적인 조직이 계통적·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반은 북한주민들을 15~20세대로 단위로 묶고 있는데 직장에 나가지 않는 여성당원들이나 간부부인을 반장으로 주민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인구이동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라면 북한은 자의적인 인구이동이 허용되지 않아 남한의 인구의 22%가 거주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서 북한의 경우 6%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전체인구 중 56%가 도시인구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북한 주민생활의 통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겠다. 북한주민의 조직화는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들의 노동당 가입 숫자는 1990년 자료에 의하면 300만을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인구의 14.8%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 4.3%, 동독이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전세계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전체인구의 6%가 군인으로서 세계에서 군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군인인구비율이 높은 이라크의 5.5%, 시리아의 3.5%, 이스라엘의 3.4% 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북한사회의 성격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맑스-레닌 주의에서는 평등을 지향하여 무계급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맑스는 인류역사를 계급과 계급 간의 투쟁의 역사로 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계급질서가 타파되고 계급없는 사회가 이룩되어 각자의 능력에 의해서 일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함으로써 인류가 개인은 전체를 위해, 전체는 개인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의 낙관적인 혁명관은 사회주의권에서의 관료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계급화현상에 의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주체사상에서는 평등주의 보다는 엘리트주의, 개인의 구체적인 삶보다는 전체주의·조직주의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조직주의 원리는 평등 보다는 상하의 위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사회 계급화 현상이 좀더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하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적과 원수를 증오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유사종교화한 이상화, 개인 보다 집단을 앞세우는 극단적 전체주의,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나마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외부정보, 그리고 세상에 부럼없다는 행복론 등이 제한적이거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북한사회의 모습이다. 세상에 부럼없다는 행복도 자족적 성격이 강하다.

근래 북한에서 주민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의복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일성이 여성들의 특정한 옷차림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김정일도 '옷차림

은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시민들이 여러가지 색깔과 형식으로 옷을 다양하게 해 입으면 거리가 한결 더 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따라 의복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민 피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남자의 인민복과 여자의 검은 통치마, 저고리가 80년대 들어 자취를 감췄다. 대신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양복 정장이 늘었고, 남자는 점퍼, 여자는 스웨터를 입는 경우가 증가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의복에서 영역이 넓어져 헤어스타일, 화장법 등이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천리마 1990년 1월호는 '우리 인민에 맞는 머리 모양'이라는 기사를 실은 바 있었다. 이 기사는 남성 머리형으로 구슬머리 해살머리 날개머리 수복머리를, 겨울철 여성머리형으로 옥류머리 수국화머리 들국화머리 조발머리를 각각 권하고 있다.

북한 식생활은 식량에 대한 배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식당에서 양권만 받던 것을 현금도 받고 완화하면서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는 부분적으로 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선전적 의미 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그나마 드문 실정인 것이다.

4. 북한의 교육

북한에서는 교육이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혁

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물질적 토대를 혁명을 통하여 바꾸고, 그러한 하부구조에 알맞도록 상부구조와 인간의식을 개조하려고 한다.

교육은 이 새로운 물질 토대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정치적 과정이다. 교육은 혁명의 수단이며, 계급투쟁의 한 형식이다.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교육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주의교육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기본적 원리는 네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데올로기 교육의 강화원리」, 「집단주의 원리」, 「조기교육의 원리」, 그리고 「교육이론과 실천의 결합」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기초하면서도 독특하게 발전되어 온 북한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 위에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 교육을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허용되면 반동적인 교육이론과 사상이 들어와 인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혁명에 알맞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인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일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리에 입각한 노동을

사랑하는 노동자, 개인의 이익 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는 혁명가 뿐만이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당과 수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을 일컫는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무장시키는데 있어서 항상 지켜야 할 원칙은 모든 사람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확고한 주체적 립장과 태도, 방법을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낡은 것, 반동적이며 비계급적인 모든 현상들과 투쟁'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정책은 로동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당의 이념이 곧 정치이념이며, 교육이념으로 구체화된다. 조선로동당 내에서 교육에 관한 정책은 비서국 산하의 교육부가 입안하고 있다.

당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북한에서의 교육 발전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공산주의 사상도입기(1945~1950), 전후복구 및 공산주의 정립기(1950~1960), 생산기술교육 및 혁명 전통 교양확립기(1960~1966), 유일사상 확립기(1966~1980), 인간 개조교육운동기(1980~)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교육, 특히 소련식 교육을 이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가, 주체사상이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확립됨에 따라 주체사상에 의한 교육으로 변화되어 왔다. 북한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

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간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목적은 직접적으로는 수령과 당에 충성하고 수령과 당이 시키는대로 따르는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으로 나타난다. 이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교육의 강화, 학교·사회·가정교육의 결합과 병진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몇차례의 개편을 통해 일반 학교교육, 성인교육체계, 특수교육체계로 체계화되었다. 취학전 교육과 의무교육을 결합하고 있는 것은 북한교육의 커다란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단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복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체능학교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북한교육은 생산과 교육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결합시키고 있다. 학생의무 노동제를 통한 노동과 교육의 결합, 고등교육재학생에 대한 현지노동의 교육과정화, 군복무 및 생산현장 경험의 대학입학 기준에의 적용, 공장대학·농장대학·수산대학 등의 일하며 배우는 교육체계의 형성 등이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직업교육 계열이 발달되어 있고, 반공반학제(半工半學制)가 특히 발달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혁명분자화」의 3대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급학교의 교육목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에컨대 취학전 아동교육은 '모든 어린이들을 혁명적인 새 인간으로 키우고,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사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중심목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 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교수교양 사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 인테리로 믿음직하게 키우는데 힘을 넣는' 데 두고,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시키며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현실과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를 배워도 우리 혁명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배우며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혁명적인 간부양성에 고등교육의 중심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의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정치사상 교양」과 「과학 기술교육」, 「체육교육」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물질적 요세의 기초로 과학기술 교육, 사상적 요새로서 정치사상 교양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김일성의 우상화와 혁명전통, 그리고 혁명정신 함양,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 반미·반일 감정의 강조에 따른 투쟁 의욕과 사회주의적 조국애 등을 고취하고 있다. 산수과목의 경우, 계산문제나 응용문제를 혁명사상 고

취라는 단원목표에 연결시켜 제시하고 있고, 역사과목도 교과내용의 대부분을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관한 글과 마르크스-레닌의 혁명사관에 의해 편성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는가? 북한사회에서는 누가 고등교육을 받는가? 북한은 11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며 배우는 교육체제를 모두 고려해보면 고등교육기관은 다양하고 학생수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종합대학교는 세개 뿐이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은 소수이며 수용인원도 많지 않다.

북한에서 교육기관의 선발기준은 출신성분과 관련이 크다. 북한헌법 제61조에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대후방가족, 명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는 특별대우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학의 선발과정은 1980년부터 '대입자격고사'를 치루고 있지만, 합격점수는 없다. 대학입학에 추천받은 자들은 '출신성분 성적 1/3, 본고사성적 1/3, 정치조직생활평점 1/3' 정도로 전형되어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어 출신성분이 좋은 것을 전제로 하여 대입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가정·사회·학교교육의 결합과 병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합과 병진정책은 비형식적 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영향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적어도 외양상 북한교육은 정치적인 통합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사회는 독특한 성격의 사회로 발전해왔다. 남북한 간의 갈등은 그동안 여러가지 계기를 통해 발전해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양측간의 불신은 극복하려면 요원한 것으로까지 비추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과연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해결해나갈 것인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 보다 먼저 통일과정을 경험한 나라에서 찾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Ⅳ.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과 그 시사점

1. 독일 통일

서독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주의체제였다. 동독은 서독과 달리 사회주의의 전형인 당에 의한 관료주의적 권력 독점과 계획경제체제로 사회발전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1989년 당시 서독이 1인당 GNP가 18,370달러인데 비하여 동독은 7,960달러에 불과하였다. 경상 GNP는 서독 11,390억달러인데 동독은 1,273억달러, 교역규모는 서독이 6,111억달러인데 비해 동독은 470억달러에

불과하였다.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체제에 내포되어 있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인생활의 균등적 궁핍화만 초래하였다. 반면 서독의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는 한편,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빈부갈등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최소화시키면서 모든 사람은 최소한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부를 창출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사회지표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 1989년 현재 사회보장 지출이 동독은 대 GNP 비율상 8.6%에 불과한데 비하여 서독의 경우 18.5%에 이르고 있었다. 서독의 통일정책은 초기에 아데나워 수상 시절에는 냉전적 요소를 갖고 있었으나, 1963년 에르하르트 정부 이래 유연성을 보이다가, 사민당의 브란트정부 하에서는 비정치분야에서의 '접근을 통한 동독의 변화'를 겨냥한 신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 1973년 유엔 동시 가입, 1974년에는 상주대표부 설치 등 법적 제도적인 진전을 보게 되었다.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슈미트 정부(1974~82)는 1974년 체육협정, 우편문화협정 등 후속협정을 체결하였고, 1983년 이래의 콜 정부 하에서도 1983년, 1984년 경제협정과, 문화협정으로 동독과의 교류,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동서독 간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선민족통일, 후국가통일' 원칙에 입각한 '선평화 후통일' 정책을 의미한다. 서독의 동방

정책은 공산주의는 극복되지 않고 다만 변화된다는 전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1단계 민족통일단계에서는 동서독 관계 개선을 통해 동서독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감소시킨다.

제2단계 국가통일단계에서는 안정된 동서독관계를 보장하는 가운데 서독체제의 우위를 자연스럽게 증명하여 궁극적인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서독의 대동독정책에 따라 동서독 간의 관계개선으로 동서독 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은 1989년의 경우 동독의 교역 상대국 중 서독의 비중이 소련 다음의 2위를 차지하게 이르렀다.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는 1972년 기본조약 체결로 교류가 제도화된 이후 급격하게 신장하였다.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인적 교류는 연간 수백만이 상호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의 경우 서독인의 동독방문은 5백50만명, 동독인의 서독방문은 3백 40만명이었다. 기본조약 체결 이후 문화교류도 늘어났었고, 1984년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정부 주도방식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되어 음악, 영화, 연극, 출판 등 민간차원의 상업문화교류가 증대되었고, 문화제의 상호전시, 문화인들의 상호방문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두가지 효과로 나타났다. 첫째, 독일 전래의 민족문화를 상호확인하면서 전통문화적 차원의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었다.

둘째, 서독의 우월한 물질문명을 동독사회로 전파하여 직접적으로 독일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서독사회는 체제적 우위로 시민들이 서독의 가치, 규범체계에 순응되었던 반면, 동독인들은 서독 사회지향적이 되었고 이는 결국 통일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통독 후 독일에서는 과연 동방정책이 독일통일을 촉진시켰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동방정책으로 동독의 공산주의체제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동독체제를 강화해준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치관을 이식하여 공산주의체제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체제가 다른 사회를 통합시키면서 그에 따른 후유증을 겪는 것은 필연적이다. 통일에 따른 후유증은 우선 경제적 침체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독일경제는 동독지역의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성장을 저하, 실업자 증가, 물가상승 등 악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서독 주민들 간에는 정신적·문화적 이질감으로 상호배타성을 보이는 한편 서독 주민은 통일세 명목의 세금부담 가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동독주민의 이주로 주택문제, 범죄문제 등으로 사회안정이 저해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반면 동독 주민들은 심리적 열등감에다가 실업, 물가등귀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대다수 독일국민들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서독의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민주적 사회, 교육제도에 적응하여 서독주민들과 일체감을 보이는데는 생활 격차의 해소 보다 오히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예멘 통일

예멘의 통일과정을 살펴보면 북예멘의 정치권력은 다양한 정치집단의 세력균형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고 대통령 중심의 일인독재체제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남예멘은 정치권력을 당과 국가기구로 집중화시키고 관료체제를 통하여 사회세력을 잘 통제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비효율성과 지도층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었다. 남북예멘은 정치이념과 권력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하였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북예멘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였고 남예멘은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북예멘은 사실상 공공경제와 민간경제가 양립한 혼합경제 체제의 양상이었고, 남예멘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산업시설의 절반 정도는 국유화 되었지만 반은 민간경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예멘의 경제체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1인당 GNP에서도 남예멘 420달러(1987년), 북예멘 682달러(1988년)로 그 격차는 큰 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남북예멘은 사회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남예멘에서는 사회주의의 이상에 따라 사회구조를 재편하려고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전통적 문화와 생활양식을 제거하는데 실패해서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부족적 유대감과 충성심이 유지되고 있었고, 종교도 이슬람 국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북 예멘 간의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별다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같이 국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상당한 정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에 따라 통일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통일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상호불신으로 통일협상은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다. 무력충돌도 발생하기도 했다. 1972년 정상회담으로 통일원칙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를 합의하였고, 1981년에는 양국 정상이 남북 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 모두 사회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였고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양국 정권 담당자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하여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화가 부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계기를 제공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냉전체제의 붕괴와 석유의 발견이었다.

1988년 정상회담에서는 국경지대 석유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서로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이는 실질적인 통일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되었다. 1989년 소련의 남예멘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의 감축으로

남예멘은 서방진영 및 북예멘과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본질적인 전환을 하게 된다. 1989, 1990년 일련의 정부 접촉으로 상호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권력배분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통일논의는 급진전되었고, 1990년 5월 26일 완전 통일하게 되었다.

통일 이후 나타난 문제점은 정치적으로 볼 때 남북 예멘의 정부조직을 기계적으로 합병하였고, 한편으로는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남북 예멘의 군대들은 현지에 계속 주둔하며 기존의 명령체계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군의 명령체계가 실질적으로 단일화되지 못하였고, 이는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자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석유수입으로 발전하리라던 경제발전도 걸프전의 영향으로 여의치 않는 가운데,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원조 중단, 해외근로자의 강제귀환으로 경제에 큰 뚫을 차지하던 외화획득이 불가능 해지면서 경제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도 남예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남예멘 지역에서는 사회집단의 시위가 빈발하고 있고, 북부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반감도 높은 편이다.

3. 분단국 통일의 시사점

독일과 예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통일문제의 논의에서 지나치게 낭만주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40여년간을 분단 상태로 지나왔고, 남북한 사회구조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민족이라는 추상화된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실패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점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통일은 점진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통일은 어느날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도 필요하다. 독일과 예멘의 경우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차원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성숙되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쉽게 왔다.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신속한 조기 통일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 통일의 후유증을 증폭시켰다는 평가를 모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적교류, 문화교류를 통하여 장기간 통일 환경을 성숙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통일을 너무 서두르거나 이의 실현을 위해 성급한 조기 통일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둘째, 대내적 통일기반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요인이다. 독일이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① 정통성 있는 민주정치의 발전, ② 튼튼한 경제력의 건설과 사회복지의 구현, ③ 사회안정의 추구를 일찍이 실현하여 내부적인 큰 혼란없이 통일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 대외적 통일여건의 조성이다. 독일의 통일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몰락과 동독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격동적인 변화과정에서 조성된 '통일의 기회'를 서독 정부가 적절하게 활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외적 통일여건의 경우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경우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의 경우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서 남북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외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측면에서 장차 바람직하게 조성된 통일에의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량을 어느 편이 좀더 슬기롭게 발휘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 서독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지휘계통상의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예멘의 경우는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예멘은 통일을 주도하는 정치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내전이라는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책임자간의 격의없는 의견교

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있다.

끝으로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언급했듯이 실질적 통일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수있다. 독일은 통일에의 기회가 주어지자 독일 정부와 기업, 국민들 모두가 단결을 해서 이루어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된지 6개월 만에 「통일조약」을 완성하고 1990년 10월 3일을 통일의 날로 만들었다.

우리도 북한의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합리적인 방향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V. 통일준비와 대학인의 역할

1. 대학인의 역할

세계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체제는 실패한 실험으로 검증되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평등을 창출해왔고, 경제적인 실패로 균등적인 궁핍화만 초래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사회주의도 그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보아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민들이 상호교류에 따라 상호

동질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은 저절로 성취되는,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일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실현」이 통일조국의 지름길이었다.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과연 대학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위와 같은 조건이 성숙하도록 유기적으로 노력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대학사회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적 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표에 치우친 나머지 과정을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었다. 더이상 이러한 비합리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증폭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민족의 장래에 이두운 그림자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자기 주장만이 옳다는 독선론을 경계해야 한다. 감상적·비현실적인 논의와 무책임한 주장도 피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환상적 기대나 감상에 빠진 나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우거나, 특정한 이념노선에 편향된 논의의 전개는 국론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이다.

아울러 흑백논리나 극단논리를 피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판단과 선택에 있어서는 지극히 다양한 대안이 있

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독선주의, 성급한 감상주의, 흑백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합리주의적 태도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에 있어서 합리주의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현실에 대한 이해는 민족 내부의 문제를 그 발생과정, 그 변화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서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세계사적인 환경변화에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세계관으로 장기간 살아온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국가의 통일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정치·사회적 통합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그 일차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그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감상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 머무른다면 이는 오히려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셋째, 문화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 창출은 새로운 시대의 이념에 적절하면서도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다른 계 부문보다 먼저 대학사회는 이러한 전형을 민족 앞에 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통일 이후의 대비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독일의 경우와 다른 형태로 통일문제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고, 문제의 성격도 다른 것일 수도 있다. 통일 이후 문제는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예기치 못했던 문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우리가 통일 현실에 접근하는 태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첫째, 사고에 있어서 개방성이 필요하다.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일차적으로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개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대방을 폭넓게 이해하고 민족화합의 장이 되자면 남북 사이에 달라진 삶의 양식과 이질성을 현실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민족구성원 모두가 상대방의 다른 입장과 이익만을 내세우지 않는 민족화합적 태도와 폭넓은 이해심을 가지는 일 또한 통일 이후의 삶을 질서있고 평화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넷째, 남북 주민 간에 개재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 상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민족적 동일성을 되찾고, 민족공동체적 삶을 회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민족사회의 통일과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갖가지 갈등의 소지를 예견하고, 이를 하나씩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양독간에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교류가 있어왔었던 반면, 우리는 아직도 가장 기초적인 교류 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간의 갈등은 인내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단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양육된 북한주민들의 특이한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좋은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토의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대학간의 교류 등은 쉽게 상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예컨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고려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1990.
-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1,2」.
도서출판 한울, 1994.
- 김성철, 「북한관료부패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 한백사, 1988.
-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한백사, 1990.
-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993.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pp. 417-432.
- 박영호·김도태, “통일환경의 변화와 8.15 경축사의 상황적
배경,”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1994. pp. 14-17.
- 오세철, “북한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주체사상과 교육
분석을 토대로,” 이영선 외,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
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993. pp. 197-226.
- 오태진, “90년대 북한사회의 변화양상과 전망,” 이영선 외,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
원, 1993. pp. 257-258.
- 이상우, 「함께사는 통일」. 도서출판 나남, 1993.
- 이영선 편저,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연세대학교 동서문

- 제연구원, 1993.
- 이영선 편저 「북한의 개혁전망과 통일과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4.
- 이종각, “북한의 교육정책과 행정 및 고등교육,” 황정규 외,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pp.204-337.
- 장석은, 「분단국의 통일과 교훈」. 통일연수원, 1993.
- 전병재, “북한사회의 갈등구조연구”. 이영선 외,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993. pp.161-196.
- 정용길,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1994. pp.33-37.
- 통일연수원, 「민족공동체 통일로 가는 길」. 1994.
- 통일원, 「92 북한개요」.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보고논총91-1, 1991.
- 한준상, “통일을 위한 남북한 교육의 과제-남북 ‘교육·문화 교류’을 위한 5단계 방안,” 이영선 외,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993. pp.259-280.
- 황정규외,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3.

통일교육용 자료(8종)

- | | |
|-------------------------------|-------------------|
| • 북한의 체제와 이념(공직자편) | 전인영(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교직자편) | 박덕규(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 • 통일과 경제적 과제(상공인편) | 이상만(중앙대 교수) |
| • 북한경제와 주민생활(근로자편) | 이태욱(서강대 교수) |
| •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여성편) | 이은숙(서울대 교수) |
| •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대학생편) | 한준상(연세대 교수) |
| •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이해(문화·예술인편) | 김문환(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경찰·공안편) | 오문관(경찰대 연구관) |

대학생편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

1995年 5月 5日 印刷

1995年 5月 10日 發行

發行處 統 一 院

教育弘報局 教育課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電 話 : 7 2 5 - 3 9 4 5

통교 95-4-22

<비매품>